

4·5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



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3일 전북 전주시 원산구 곳곳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국민의힘 김경민(기호 2번), 진보당 강성희(기호 4번), 무소속 임정연(기호 5번), 안해우(기호 7번), 무소속 김호서(기호 8번) 후보.

전주을 금배지 쟁탈전 본격

이상직 전 의원 당선무효로 치러져… 후보자들 유세전략 각양각색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전주을 금배지 쟁탈전이 본격 시작됐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 도전장을 낸 6명의 후보들이 일제히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비가 내렸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후보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후보들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자리를 잡았다. 비옷을 입은 채 기호와 후보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흥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기

세가 매서웠다. 진보당 종인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전주대학교 사거리 일대에 많은 선거운동 인력을 투입했다.

강 후보는 “엄중한 현실 앞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직한 진보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연 후보는 완

산구 KT사거리, 삼천동 등을 돌며 “이번 재선거는 무능 폭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저의 당선이 무능 정권에 대한 존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

주 효천사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선거 운동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김 후보에게

보의 번호인 8을 손으로 그리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창문을 내리고 염지를 치켜 세우거나 경적을 울리며 그를 응원했다.

특히 함께 출마한 후보들의 전파이력을 높이면서 강 후보와 임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과격한 전파가 있는 이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일 잘하는 후보,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우 후보는 태권도 복장을 입은채 전북경찰청 부근

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여당 후보인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이날 방문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주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재보선 공식운동 첫날인데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한 공식운동은 4월 4일 0시까지 진행되며, 오는 31일과 4월 1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 투표는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스

“호남에 대한 애정·진심 변함없어”

국힘 김기현 대표, 전주서 현장 최고위서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김 후보는 우리 전북도당의 고문이기고 지역 중진급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높은 경륜과 정치적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는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전주시장에 출마해 15.54%를 득표해 호남 전체 지자체장 후보중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을 재선가는 더 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무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범죄경력없는 깨끗한 후보 김경민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전주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전주는 오랜 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 김경민 후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공약은 전주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는 “우리당 정운천 의원이 특별 벌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한다”며 “겉모양만 바꿀게 아니라 내용을 가득 채우려면 집권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1조6884억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 6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미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긴답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889억2,200만 원 가운데 4억8,344만원을 삭감한 1조 6,884억8,856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7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서 한경봉 의원은 선진 보건행정을 시행할 것을 군산시보건소에 촉구했고,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를 향해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10년 된 균대역사공간 평가 및 체계적인 3.5 만세운동 계승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설경민 의원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경구 의원은 군산비단의 수산지원 보전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73차 월례회가 23일 원주군의회에서 열렸다.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 철회를”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열고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법 제정·시승격 완화 특례 부여 건의안도 의결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제273차 월례회를 통해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증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시승격 완화 특례 부여 건의안 등이 인건을 원주군의회에서 23일 의결했다.

현재 신동진벼는 소비자가 뽑은 12 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쌀이며, 전북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막아서지 못할 시 고스란히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동진벼에 대한 대체 품종 검증과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때까

지 신동진벼 수매와 보급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신동진벼 매입·공급 중단 발표 이후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자 정부는 “2020년까지 퇴출 시기를 연장한다”며 입장문을 비쳤다.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은 소리의 결과는 민심의 불씨를 기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협의회는 “별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독립권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검수완박법’ 유지… 현재, 국힘 청구 기각·檢 청구 각하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혐의로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결정의 요지다.

현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회장을 상대로 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회 부문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

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 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인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체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 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현재는 같은 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각 결정했다.

현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스